■광주시장 후보에 듣는다 한나라당 정용화

"광주의 자존심, 이젠 경제에서 찾을 때"

R&D 특구 육성·법학대학원 추가 유치 등 앞장

광주는 '고립된 섬'…현 정부와 소통 역할 하겠다

-광주의 당면 현안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광주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자신감 상실'이 가장 문제다.

이는 광주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온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특히 야당이 된 지금은 불안감과 자신감 상실이 더욱 커졌다. 이제 시민들이 진지한 생각을 해야할 때다. 30년간의 고정관념을 바꿔 새로운 선택을 한다면 광주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으로 본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호남에서 반 이명박 정서는 강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광주에 나선 이유는?

▲고향 광주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절박해 나섰다. 수도권에서 공천을 받을 수도 있었고, 비례대표도 선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고향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청와대 비서관 시절 광주시와 전남도 고위 공무원들이 지역현안을 들고 많이 찾아왔다. 오죽 정부와의 소통 채널이 없으면 찾아왔겠는가 싶었다. 지역현안은 많은 데 정부와 채널이 없었다. 광주와 전남은 고립된 섬이나 다름없어 보였다. 이를 벗어나야 광주·전남이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와 소통역할을 자청한 것이다.

-후보가 제시하는 광주의 비전은 무엇인가?

▲광주는 민주화 운동의 성지다.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를 꽃피운 일등공신이다.

하지만, 지금 광주는 그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민주정부를 만든 곳이지만, 지역 경제는 피폐하고 일자리를 찾아 광주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광주의 비전은 정치도시에서 경제도시로 발전하는 데 달려있다. 광주의 자존심을 과거 민주당이 아닌 경제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 미래 비전으로 '잘 사는 광주, 당당한 광주, 세계속의 광주'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복지 광주, 자동차·부품단지 조성, 아시아 문화수도 육성, 컨벤션·박람회 활성화 등의 7대 공약을 실천해 나가겠다. 10년 후에는 광주가 자유·교육·세계도시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다.

-후보가 광주시장에 적임인 이유는?

▲첫째는 광주가 변화를 상징한다. 그 자체로 많은 효과가 있다. 투자 유치가 이뤄지고, 정부의 지원도 적극적이 될 것이다. 왜냐면 광주가 그동안의 폐쇄적이 이미지를 벗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현 정부와 등지고 광주가 발전할 수 없다. 재정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광주 발전을 위해서라도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광주 R&D특구에 1조 원이 투자된다. 호남에 대한 역대 정부 최대의 투자이다. 그런데 이게 성공하려면 정부와 3~4년간 긴밀한 협조 속에서 이뤄져 한다. 이게 성공해야 하는데, 야당 시장이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된다.

-광주시장이 된다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은?

▲집권 여당의 힘 있는 후보로서 중앙부처 등과 협의해 정책들을 도출해냈다.

광주의 뚜렷한 비전 제시와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예산 지원을 충분히 확보한 가운데 정책 결정이 이뤄졌다. 우선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등 각종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예산확보에 주력할 것이다. 더불어 광주의 취약한 경제기반을 탄탄히 하는 것이다. 광주공항을 이전시켜 그 자리에 기아차 공장 증설·이전과 자동차·부품단지를 조성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이뤄나갈 계획이다. 특히 '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R&D 특구를 첨단 미래산업인 융·복합산업 전문 R&D 특구로 육성해 향후 100년은 광주가 먹고사는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만들겠다. 이밖에 교육환경 개선과 시설 확충, 법학대학원 추가 유치 등으로 광주가 대한민국을 이끄는 인재육성 도시가 되도록 할 것이다.

만약, 시장이 되지 못하더라도 소속 정당에 상관없이 광주시장이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도 약속할 수 있다.

-지역민심을 어떻게 보는가?

▲하루가 다르게 민심이 변하고 있다. 놀랄 정도다. 많은 시민들이 격려를 해주고 있다.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했다. 민생은 뒷전인 채 오로지 권력만 잡겠다는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해 염증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민주당의 경선 과정이 민주주의의 기본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광주시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짓밟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시민들이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정용화는 누구

대학교수와 연구원 등으로 주로 학계에서 활동했다. 서울대에서 석·박사를 취득하고 장학금을 받아 하버드대학과 동경대학, 북경대학 등 국내외 주요대학에서 교수와 연구원 등을 지낸 유학파이기도 하다. 은사인 류우익 교수(전 대통령실장·현 중국대사)와의 인연으로 2007년 3월 이명박 대통령 후보 선거 캠프에 참여하면서 정치에 첫발을 내디뎠다. 청와대 연설·기록 비서관 을 역임한 MB맨이다.

■정용화 신상 메모

출생	강진
본관	慶州
생년월일	1964년 9월 9일(음)
신체	키 184㎝/몸무게 80㎏
학력	조대부중, 인성고, 서울대 (외교학/석사, 박사)
주요경력	연세대학교 연구교수, 하버드대·북경대·동경대·객원연구원 청와대 대통령실 연설·기록비서관 광주·전남 발전정책포럼 자문위원 광주새날학교 이사장
가족관계	부인과 1남1녀
취미	여행
혈액형	B
좌우명	정정당당(正正堂堂), 화이부동(和而不同)
애창곡	허공, 갈무리
쉴 때 가족과 하는 일	산책
아내에게 주로 하는 말	고마워요
자녀들에게 주로 하는 말	정정당당하게 살자
좋아하는 연예인	씨엔블루 정용화(가수)
좋아하는 음식	아내가 해준 볶음밥
가장 아끼는 소장품	만년필
별명	전봇대
저서 혹은 논문	저서:문명의 정치사상,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외 13권 논문:전환기의 자주외교의 개념과 조건, 한국인의 근대적 자아형성과 오리엔탈리즘 외 20여편
존경하는 인물	공자, 간디, 세종대왕
주량/흡연	소주반병
홈페이지	www.yhnet.kr
블러그	http://yhnet.tistory
이메일 주소	yhchung@chol.com

故 한준호 준위 유가족 조문 27일 경기 평택 제2함대 천안함 46용사 합동분향소에서 고 한준호 준위의 가족이 유가족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민군이 원수들에 통쾌한 보복"

北, 당원 사상교육서 언급

천안함 침몰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는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북한 내 공장의 당원 사상교육 자리에서 "인민군이 원수들에게 통쾌한 보복을 안겼다"는 내용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인터넷매체 '데일리NK'는 27일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 지난 24일 온성군 A기업소(공장)의 당원 '토요 정세강연회'에서 '당 세포비서'가 "최근 영웅적인 조선인민군이 원수들에게 통쾌한 보복을 안겨, 남조선이 우리의 자위적 군사력에 대해 국가적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또 "'건군절'(인민군 창립기념일.4월25일)을 맞아 열린 강연회는 '우리 군사력에 대해 자부심과 긍지를 갖자'는 내용으로 진행됐다"면서 "당 세포비서가 남한 군함 침몰 사건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참석한 당원들은 소문으로 나돌던 이 사건이 실제 있었음을 확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매주 토요일 각 기업소나 직장, 당조직 등에서 강연회를 열어 당조직 책임자들이 당의 정책이나 주요 정세에 대해 설명하는데, 강연 자료는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일괄 제작해 배포한다. 이는 24일 다른 곳의 당원 교육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공지됐음을 의미한다.

데일리NK는 이어 신의주 등의 다른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주민 열에 일곱은 남한 함정의 침몰 소식을 알고 있으며, 대부분 북한 해군이 침몰시킨 것으로 안다"면서 "이런 소문이 퍼져도 특별히 단속하는 분위기는 아니어서, 북한 당국이 외부에는 자신들의 연관성을 부인하면서 주민들에게는 인민군의 전과를 알리려는 것 같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北 개입 드러나면 순직 장병 전사 처리"

정부 '천안함 침몰' 방침 정해

정부와 군당국은 천안함 침몰사고로 순직한 장병들의 전사 처리 여부와 관련, 북한이 개입됐다는 개연성이 드러나면 즉시 '전사'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7일 "천안함 침몰원인 규명 전까지는 순직 장병들을 '전사에 준하는 예우'를 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북한이 개입했다는 개연성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즉시 '전사'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순직 장병들의 전사 여부는 해군참모총장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정부와 군은 조사 결과에 따라 전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장병들의 전사 처리 기준은 교전(交戰) 여부에 있다"면서 "하지만 서해 접적지역에서 초계 임무 중인 함정을 공격했다면 전사 처리 기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어뢰에 의해 맞았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 아니냐"면서 "순직 및 실종 장병들이 '전사' 처리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전사에 준하는 예우'나 '전사' 처리됐을 때 보상금의 규모는 차이가 없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보상금은 간부의 경우 순직시 1억4천100만~2억4천700만원, 전사시 3억400~3억5천800만원을, 병사는 순직시 3천650만원, 전사시에는 2억원이 지급된다. /연합뉴스